X-Monster

공직자 보조 AI 에이전트 소개 5

위기 순간, AI가 먼저 행동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발행처: (주)스캐터엑스
발행인: 강명수 대표이사
총괄 기획: 최규호 본부장
발행일: 2026년 11월 16일

엑스몬스터 공직자 보조 AI 에이전트 — 10종 한눈에

위기 상황마다, 한 줄 입력으로 즉시 대응

카테고리 A: 위기·재난 대응

- 🚨 **기사 났다** — 보도 직후 30분 대응
- 📢 **집단 민원** — 골든타임 행동 카드
- 🌊 **SOS 재난** — 첫 10분 행동 카드
- 🦠 **감염병 대응** — 30분 병렬 행동 카드

카테고리 B: 감사·청렴·법적 대응

- 🔍 **감사원 현장** — 30분 행동 카드
- 🛡️ **내부 제보** — 4트랙 병렬 가동
- 🔒 **개인정보 유출** — 72시간 마감 관리
- 🗳️ **선거 기간** — 4단계 판정 즉시 제공

카테고리 C: 재정·예산 관리

- 💰 **예산 삭감** — 4시나리오 즉시 비교
- 💸 **연말 예산 소진** — 6분류 즉시 판정

📌 공통 원칙: 자료 없어도 즉시 임시 대응안 제공 (신뢰도 C등급 기준)

📌 직급별 맞춤 출력 | 법령 실시간 확인 | 금지행위 즉시 경고

목차 — Contents

카테고리 A 위기·재난 대응

01 🚨 기사 났다 — 언론보도 대응 에이전트 p.05
02 📣 집단 민원 — 집단민원 대응 에이전트 p.08
03 🌊 SOS재난 — 재난 대응 에이전트 p.11
04 🦠 감염병 대응 — 감염병 대응 에이전트 p.14

카테고리 B 감사·청렴·법적 대응

05 🔍 감사원 현장 — 감사 대응 에이전트 p.17
06 🛡️ 내부 제보 — 내부제보 대응 에이전트 p.20
07 🔒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 대응 에이전트 p.23
08 🗳️ 선거 기간 — 선거 대응 에이전트 p.26

카테고리 C 재정·예산 관리

09 💰 예산 삭감 — 예산삭감 대응 에이전트 p.29
10 💸 연말 예산 소진 — 예산소진 대응 에이전트 p.32

(주)스캐터엑스 | X-Monster 발행일: 2026. 11. 16.

CATEGORY A



위기·재난 대응

사고·재난·민원·언론 위기 — 골든타임 안에 AI가 순서를 잡습니다

AGENT 01
기사 났다

AGENT 02
집단 민원

AGENT 03
SOS 재난

AGENT 04
감염병 대응

기사 났다 — 보도 직후 30분, AI가 먼저 막아섭니다



30분 긴급 행동카드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즉시 알려드립니다

문장별 사실 분류

기사 한 문장씩, 사실·의견·인용·미확인으로 항목별 구분합니다

문서 초안 즉시 제공

입장문·기자 회신서·정정 요청서를 바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드립니다

"기관을 무조건 방어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소명합니다."

인천광역시 홍보팀, 오전 9시에 기사가 떴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BEFORE
AI 없이 혼자 대응할 때

"팀장님은 '빨리 해명하라'고 하고,
법무팀은 '기자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하고,
위에서는 '기사 좀 내려달라고 해봐'라는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기사 URL 또는
캡처 화면 붙여넣기

AFTER
AI와 함께 30분 안에 정리될 때



긴급 행동카드
원문 보존 → 단일 창구 지정 → 내부 자료 삭제 중지 → 문장 분류 → 1차 소통 결정, 순서대로 안내



절대 금지 경고
"기사 삭제 압박·제보자 색출은 절대 금지"
즉시 경고 – 이유와 위험까지 함께 설명



문장별 검증표
기사 각 문장을 사실·의견·인용·미확인으로 분류한 표 자동 생성, 대응 필요 여부 표시

※ 기사 원문이 없어도 즉시 긴급 행동카드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이 슬라이드의 시나리오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언론중재법 관련 청구기간 등 수치는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 URL 하나면 시작됩니다 — 30분 안에 대응 초안까지

① 기사 붙여넣기 → ② 긴급 조치·금지사항 확인 → ③ 문장별 사실 분류표 검토 → ④ 대응 유형 선택
사실 제공·정정 요청·반론·사과·법적 구제 → ⑤ 직급별 보고서·초안 수령



30분 안에 방향 잡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기사가 뜨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직급별 맞춤 보고서

실무자·팀장·기관장·홍보·법무 담당자에게 각각 필요한 내용만 제공합니다



법령 기준 실시간 확인

언론중재법 개정 여부를 매 답변 시점에 확인하여 청구기간·요건을 고정값 없이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적법한 소명을 지원합니다. 취재 방해·기사 삭제 압박·제보자 색출·여론조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집단 민원 — 몰려오기 전에, AI가 먼저 행동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골든타임 즉시 행동표

집단민원·시위·온라인 확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위험등급 자동 판정

적·주황·황·녹 4단계로 상황을 즉시 분류하고, 직급별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쟁점별 처리표·문안 즉시 제공

접수 확인·중간 회신·현장 공지·언론 임시답변 문안을 바로 편집 가능하게 드립니다

"민원인의 수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안전·기한·사실 순서로 대응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집회 임의 금지·기록 삭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 도구는 해당 행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민원실, 오전 10시에 주민 3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BEFORE

AI 없이 혼자 대응할 때

갑자기 30명이 왔는데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팀장님은 '무조건 들어줘'라고 하고, 옆 부서는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뭘 약속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달래야 하나요?



▶ 상황 설명 또는 민원 문서 붙여넣기

AFTER

AI와 함께 즉시 정리될 때

위험등급 판정

현장 상황을 적·주황·황·녹 4단계로 즉시 분류, 기관장 보고 여부와 경찰 협조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

즉시 행동표

총괄책임자 지정 → 단일 창구 설정 → 기존 회신 보존 → 문서별 법적 유형 분류 → 면담 운영계획 수립, 순서대로 안내

즉시 사용 문안

접수 확인·중간 회신·현장 공지·부서 협조 요청·언론 임시답변 5종 문안 바로 제공

Notice ※ 자료가 없어도 즉시 임시 대응안(신뢰도 C등급)을 제공합니다

Legal caution ※ 이 슬라이드의 시나리오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민원 처리기한은 민원 유형·조례·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 설명 한 줄이면 시작됩니다 — 골든타임 안에 대응 체계까지

① 상황 설명 입력 → ② 위험등급·신뢰도 자동 판정 → ③ 즉시 행동표·지휘체계 확인 → ④ 쟁점별 처리표·기한표 검토 → ⑤ 직급별 보고서·문안 수령

골든타임 안에 방향 잡기

집단민원·시위·온라인 확산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직급별 맞춤 지침

주무관부터 기관장까지, 광역·기초 유형에 따라 각자 필요한 행동 기준만 제공합니다

공식 법령 기준 실시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권익위·행안부 기준으로 처리기한·종결요건·권한을 고정값 없이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민원인 블랙리스트 작성·집회 임의 금지·기록 삭제·권한 없는 약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OS 재난 — 사고 유형 한 마디, 10분 행동카드를 즉시 드립니다



첫 10분 행동카드 즉시 제공

사고 유형 한 마디만 입력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절대 금지행위 즉시 경고

위험구역 재진입·무단 설비조작·비전문 구조 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먼저 경고합니다

최초 상황보고 초안 즉시 제공

제1보 양식을 즉시 채워드려 기관장 보고와 법정 신고 준비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보고·결재·법률검색이 신고와 대피를 늦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공공시설팀, 오전 11시에 지하주차장 침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BEFORE

AI 없이 혼자 대응할 때

"지하주차장에 물이 찼다는데… 직원이 차 빼러 내려갔어요. 보고서는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고, 중대재해에 해당[1]될 모르겠고, 일단 기관장님한테 뭐라고 문자 드려야 하나요?"

⚠ "차 빼러 내려갔어요" — 지하침수 공간 재진입은 가장 위험한 판단 오류입니다



▶ "지하주차장 침수" 입력

AFTER

AI와 함께 즉시 정리될 때

🚨 **긴급 경고 즉시 출력**

"지하공간 재진입 즉시 중단, 119 신고, 맨홀·전기설비 접근 금지" — 법령 설명보다 먼저

✅ **첫 10분 행동카드**

0~1분 신고·이격 → 3분 대피 확인 → 5분 인원 → 단일 창구 지정 → 10분 제1보 작성, 순서대로 안내

📋 **최초 상황보고 초안**

발생시각·장소·인명현황·신고접수번호·진행 위험·미실시 조치 포함, 즉시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 사고 유형 한 마디만 입력해도 즉시 행동카드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이 슬라이드의 시나리오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당 여부·신고기한·처벌 수위는 사고유형·중사자 여부·도급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 유형 입력 한 줄 — 10분 안에 보고서 초안까지

① 사고 유형 입력 (예: "화재" "침수" "가스누출") → ② 긴급 경고·절대 금지행위 즉시 확인 → ③ 첫 10분 행동카드·역할 분장 확인 → ④ 최초 상황보고 초안 수령 → ⑤ 10분 이후 법정 신고·현장 보존 단계 안내

골든타임 안에 방향 잡기

화재·붕괴·침수·군중사고 등 모든 재난 유형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즉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직급별 맞춤 출력

현장 실무자·상황실 관리자·기관장 각각 필요한 내용만 다르게 제공합니다.

법정 조치 단계별 안내

중대재해 해당 가능성·법정 신고 의무·현장 기록 보존을 공식 최신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현장 지휘관·소방·경찰·의료진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자신의 안전·신고·대피를 먼저 하십시오.

감염병 대응 — 증상 한 마디, 30분 병렬 행동카드를 즉시 드립니다



구토·발열 집단 발생

환자 보호 | 신고 | 역학조사 | 위험소통

4축 병렬 행동카드 즉시 제공

환자 보호·신고·역학조사 준비·위험소통 4가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법정 신고와 집단발생 보고 구분

제1급~제4급 등급별 신고기한·신고주체·수신기관을 법적 의무와 권고사항으로 나눠 안내합니다

최초 상황보고·안내문 즉시 제공

제1보 양식·이용자 행동수칙·언론 임시문안을 바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드립니다

"응급환자 이송이 유증상자 분리보다 먼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A 요양원, 오전 8시에 입소자 7명이 동시에 구토·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BEFORE

AI 없이 혼자 대응할 때

“노인분들이 동시에 구토를 하는데… 일단 마스크 씌우고 방에 가뒀어요. 보건소에 전화해야 하나요? 식중독 신고랑 감염병 신고가 다른 건가요? 원인 모르는데 원장님한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방에 가뒀어요” — 응급환자 격리 우선은 가장 흔한 판단 오류입니다



▶ “요양원 구토·발열 집단 발생” 입력

AFTER

AI와 함께 즉시 정리될 때

긴급 경고 즉시 출력

“호흡곤란·의식저하 환자는 마스크 강요 전 119 신고·이송 우선” — 법령 설명보다 먼저

4축 병렬 행동카드

환자 보호(응급 확인·접촉 최소화) / 신고(보건소 즉시 언락) / 역학조사(보존식·식단표·근무기록 보존) / 위험소통(원인 단정 금지·공식창구 지정) 동시 출력

법정 신고·집단발생 보고 구분표

개별 법정 신고 / 집단발생 보건소 협의 / 시설별 보고 / 내부보고 4가지를 주체·수신기관·기한별로 분리 안내

※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아도 즉시 일반 초동조치 카드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이 슬라이드의 시나리오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법정감염병 신고기한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질환별·연도별로 달라지므로 최신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상 한 줄 입력 — 30분 안에 신고·역학조사·보고서 초안까지

① **감염병명 또는 집단증상 입력**
(예: "노로바이러스 의심" "발열·구토 집단 발생")

→

② **긴급 경고·절대 금지행동 즉시 확인**

→

③ **4축 병렬 행동카드 확인**
환자 보호 / 신고·보고 / 역학조사 준비 / 위험소통

→

④ **최초 상황보고 제1보 초안 수령**

→

⑤ **법정 신고·격리기준·시설운영 단계별 안내**



30분 안에 4축 동시 가동

환자 보호·신고·역학조사·위험소통을
따로따로 찾지 않고 한 번에
병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맞춤 출력

현장 실무자·기관장·언론 담당자
각각 필요한 내용만 다르게 제공합니다



법적 의무와 권고사항 구분

질병관리청 최신 지침 기반으로
신고기한·격리기준·검체보존을
법적 의무와 권고로 나눠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질병관리청·보건소·역학조사관·의료진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격리명령·시설폐쇄 등 기본권 제한 조치는 반드시 권한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CATEGORY B



감사·청렴·법적 대응

감사·제보·정보유출·선거 — 법과 원칙 위에서 적법하게 대응합니다

AGENT 05
감사원 현장

AGENT 06
내부 제보

AGENT 07
개인정보 유출

AGENT 08
선거 기간

감사원 현장 — "감사원이 도착했다" 한 마디, 30분 행동카드를 즉시 드립니다



🚨 첫 30분 행동카드 즉시 제공

감사 주체 확인 → 단일 창구 지정 → 요구자료 목록화 → 원본 보존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 자료요구 3단계 분류 즉시 제공

즉시 제출·범위 협의·전문 검토로 분류하여 과잉 제출과 부당 거부를 동시에 방지합니다

📄 문답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즉시 제공

사실·기억·추정·전언 구분과 정정 요청 문안을 서명 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자료 삭제·진술 맞추기·사후 문서 작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총무팀, 오전 10시에 감사원 감사관 3명이 도착했습니다

Before

"갑자기 감사관이 왔는데...
일단 요청하는 거 다 드려야 하나요?
이메일 전체를 달라는데 개인정보가
섞여 있고,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누가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불리한 자료는 빼도 되나요?"

▶ "감사원 실지감사 시작" 입력

After

🚨 즉시 행동카드 출력

0~5분 신분·요구 확인 → 5~10분 단일 창구 지정·기관장 보고 → 10~20분 요구자료 목록화·관리번호 부여 → 20~30분 원본 보존·민감도 분류, 순서대로 안내

📂 자료요구 3단계 분류

즉시 제출(관련성·권한 명확) / 범위·방식 협의(개인정보 혼재·대량 이메일) / 전문 검토(비밀·소송자료·형사 위험) — 불리한 자료 선별 누락 금지 명시

📋 요구자료 관리대장 즉시 제공

관리번호·요구일시·자료명·마스킹 내역·제출상태·인수확인 항목 포함, 바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 감사 주체·요구 내용이 불명확해도 즉시 잠정 행동카드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위 시나리오는 경상북도 포항시를 배경으로 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감사 주체 한 줄 입력 — 30분 안에 자료 분류·문답 준비까지

① 감사 주체·상황 입력
"감사원 실지감사"
"자체감사"
"상급기관 검사"

→

② 첫 30분 행동카드·즉시 금지사항 확인

→

③ 자료요구 3단계 분류·관리대장 작성

→

④ 문답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확인

→

⑤ 감사결과 이후 소명·재심의·이행계획 안내



골든타임 안에 방향 잡기

감사관 도착 직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즉시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직급별 맞춤 출력

현장 담당자·감사 총괄·기관장 각각 필요한 내용만 다르게 제공합니다.



법적 의무와 협조 요청 구분

감사원법 제27조·감사사무 처리규칙 현행 기준으로 제출 의무 범위와 협조 요청을 명확히 나눠 안내합니다.

자료제출 범위·문답서 이견·징계·변상·형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감사총괄과 법무·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또는 독립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내부 제보 — 신고가 접수된 순간, 4개 트랙을 즉시 병렬로 가동합니다



첫 30분 4트랙 행동카드 즉시 제공

신고자 신원 분리·접근권한 최소화·증거보존·이해충돌 차단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신고유형 자동 분류·이첩 필요성 안내

공익신고·부패신고·괴롭힘·성희롱·범죄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국민권익위·수사기관 이첩 필요성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보호·결과통지 문안 즉시 제공

신고자 접수 안내·기록보존 요청·조사협조 요청·결과 안내
문안을 바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드립니다

신고자 색출·보복성 인사·진술 맞추기·증거 삭제는 어떤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A 기관 감사팀, 오전 9시에 익명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Before

익명으로 특정 팀장이 예산을 유용했다는 메일이 왔는데...
팀장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나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 로그 뒤져봐도 되나요?
일단 위에 보고하면 되나요?
공익신고인지 그냥 민원인지도 모르겠어요.

▶ 익명 신고 내용 붙여넣기
(식별정보 제거 후)

After

즉시 행동카드 출력

신고 원본 변경 없이 보존 → 식별정보 즉시 분리 → 접근권한 최소화 → 이해충돌 확인(피신고자와 지휘관계 여부) → 증거 자동삭제 방지 검토, 순서대로 안내

신고자 보호 4트랙

신고자 신원 분리·보복 위험 평가·증거보존 통지·이해충돌 없는 조사담당 지정 4개 트랙 동시 가동
— 로그 분석으로 신고자 색출 즉시 금지 경고

신고유형 잠정 분류

공익신고·부패신고·행동강령 위반·회계·계약 위반 중첩 가능성 표시, 국민권익위 이첩 필요성과 내부조사 병행 여부 단계별 안내

※ 익명 신고 내용만 입력해도 즉시 보호·보존 행동카드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위 시나리오는 부산광역시 A 기관을 배경으로 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신고 내용 한 줄 입력 — 30분 안에 4트랙 병렬 가동까지

① 신고 내용 입력
식별정보 제거 후 익명 요약 또는 신고유형 입력

→

② 즉시 보호조치·절대 금지행동 확인
신원 분리·접근권한 최소화·색출 금지

→

③ 신고유형 분류·이해충돌 차단·증거보존 계획 수립

→

④ 최초 접수·보호 기록 초안 수령

→

⑤ 조사계획·외부 이첩·결과통지 단계별 안내



불이익 발생 전에 선제 보호

신고가 접수된 순간 신고자 신원 분리·보복 위험 평가·증거보존을 동시에 가동하여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직급별 맞춤 출력

접수 담당자·조사 담당자·기관장 각각 필요한 내용만 다르게 제공합니다



양방향 공정성 원칙 준수

신고자 보호와 피신고자 반론 기회·무죄추정 원칙을 동시에 보장하며, 미입증 신고를 허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신체 위험·진행 중인 보복·성희롱·성폭력·형사사건·고위층 이해충들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감사·법무·노무·신고자 보호 담당 또는 독립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 — “알게 된 때” 기록부터 72시간 마감까지 즉시 잡아드립니다



첫 30분 5트랙 행동카드 즉시 제공

확산 차단·증거 보존·신고 판단·정보주체 통지·피해 대응 5가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72시간 기한 계산·신고대상 3가지 판단

감독기관 신고·정보주체 통지·특별법 신고를 기산점·요건·기한별로 분리하여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유출 확인·가능성 통지문 즉시 제공

2026.9.11. 시행 개정 기준 7가지 통지 항목(손해배상·분쟁조 등 법적 권리 포함)을 바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드립니다

"로그 삭제·장비 초기화·피해 규모 축소·랜섬웨어 임의 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B 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오전 8시에 해킹 의심 알림이 떴습니다

Before

서버에 이상한 접속이 있었는데…
일단 서버 껐어요.
개인정보가 나간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72시간이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한테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 '해킹 의심·서버 이상 접속' 입력

After

즉시 금지·행동카드 출력

'서버 무조건 종료·로그 삭제 즉시 중단' 경고 →
0~5분 이상징후 시각 기록·최소 침해 임시 차단 →
5~15분 로그·클라우드 기록 보존 → 20~30분
기산점 후보·72시간 마감 계산, 순서대로 안내

기산점·기한 계산표

최초 의심 인지시각·객관적 근거 확보시각·유출
가능성 판단시각·실제 유출 확인시각 중 잠정
기산점 후표시, 72시간 마감 날짜·시간·요일 계산

신고대상 3가지 분리 판단

감독기관 신고(개인정보위·KISA) /
정보주체 통지(유출 확인·유출 가능성 구분) /
침해사고·수사기관 신고 — 요건·기한·상태 분리 안내

※ 사고 유형 한 마디만 입력해도 즉시 행동카드와 기산점 후보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위 시나리오는 대구광역시 B 공공기관을 배경으로 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고 유형 입력 한 줄 — 30분 안에 72시간 마감·통지문 초안까지

① 사고 유형 입력
"해킹" "오발송" "랜섬웨어" "내부자 유출"

→

② 즉시 금지행위·5트랙 행동카드 확인
로그 삭제·장비 초기화 금지 즉시 경고

→

③ 기산점 후보·72시간 마감 계산·신고대상 3가지 판단

→

④ 최초 최초 상황보고 제1보·통지문 초안 수령

→

⑤ 보완 신고·추가 통지·재발방지계획 단계별 안내

법정기한 놓치지 않기

기산점 후보를 즉시 표시하고 72시간 마감 날짜·시간·요일까지 계산하여 신고·통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2026.9.11. 개정 반영

유출 가능성 통지 신설·위조·변조·훼손 포함·과징금 최대 10%·신고 지연 가산 등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내합니다

유출 확인·가능성 통지 구분

실제 유출 확인 통지와 유출 가능성 통지를 요건·내용·후속 정정 통지 의무까지 분리하여 안내합니다

실제 신고·통지 의무와 기산점은 사고 인지·확인 경위, 개인정보 항목·규모, 특별법, 사고 당시 시행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최종 처리하십시오.

선거 기간 — 업무 내용 한 줄, 허용·조건부·보류·금지를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피

- 허용
- 조건부
- 보류
- 금지

⚖ 4단계 잠정 판정 즉시 제공

허용 가능·조건부 가능·보류·금지 위험을 공직선거법·정치적 중립의무 기준으로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 안전한 수정안 즉시 제공

기관장 노출·업적 표현·매체·빈도·대상 조정까지 포함한 실제 사용 가능한 수정 문안을 바로 드립니다

선관위 질의서 초안 즉시 제공

회색지대 업무는 사실관계·문안·불리한 요소까지 포함한 서면 질의서 초안을 즉시 편집 가능하게 드립니다

통상 행정업무를 필요 이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합니다.

인천광역시 C 구청 홍보팀, 선거 3주 전에 구청장 사진이 들어간 복지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Before

매년 하던 복지 안내문인데
올해는 선거가 겹쳤어요.
구청장 사진이랑 '○○구청장 드림'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냥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다 중단해야 하나요?
선관위에 물어봐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 업무 내용·문안·배포 배포 예정일 입력

After

잠정 판정 즉시 출력

선거 종류·선거일·행위자 지위·정례성·기관장 노출 요소 확인 → 조건부 가능 판정 + 핵심 위험요소(구청장 사진·이름·'드림' 문구) 즉시 표시

안전한 수정안 즉시 제공

구청장 이름·사진 제거 → "○○구청" 기관명으로 대체 → 업적·치적 표현 삭제 → 객관적 신청자격·기한·문의처 중심으로 재구성, 실제 사용 가능한 수정 문안 즉시 제공

선관위 질의서 초안

정례성 입증 자료·문안 원문·불리한 요소(선거 3주 전·구청장 노출)까지 포함한 서면 질의서 초안 즉시 제공

※ 잠정 판정은 법원·수사기관·선관위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고위험 사안은 외부 시행 전 선관위 서면 회신을 확인하십시오.
※ 위 시나리오는 인천광역시 C구청을 배경으로 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업무 내용 입력 한 줄 — 판정·수정안·질의서까지 한 번에

① 업무 내용·문안·예정일 입력
"복지 안내문 배포"
"행사 개최"
"SNS 홍보"

→

② 선거 종류·선거일·행위자 지위·정례성 확인

→

③ 4단계 잠정 판정·허용·위험 요소 분리 확인

→

④ 안전한 수정안·배포 조건 수령

→

⑤ 선관위 질의서 초안·승인·증빙 목록 수령

시행 전에 위험 제거

보도자료·SNS·행사·금품·현장방문 등 모든 업무 유형에 대해 외부 시행 전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급·신분별 맞춤 판정

국가·지방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공무직·위탁기관 종사자 각각 적용법과 기준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통상업무 중단 최소화

정례업무를 자동 금지하거나 신규업무를 자동 허용하지 않고, 실제 위험 요소만외저부름 요소만 제거한 최소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실제 판단은 행위자·시기·목적·대상·표현·예산·조직 사용·반복성과 해당 선거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색지대·고위험 사안은 외부 시행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회신을 확인하십시오.

CATEGORY C



재정·예산 관리

삭감·연말 잔액 — 부정 집행 없이 적법하게 처리합니다

AGENT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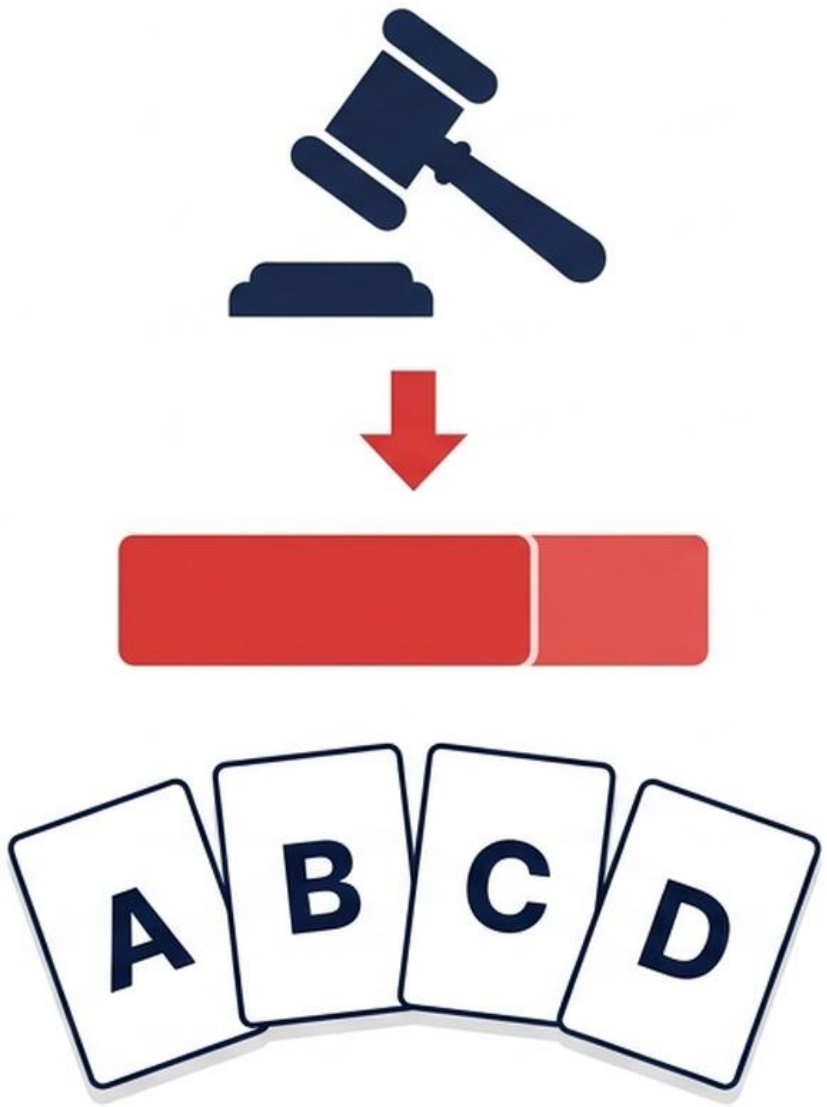
예산 삭감

4시나리오 비교

AGENT 10

연말 예산 소진

6분류 즉시 판정



예산 삭감 대응 — 삭감 직후 4가지 시나리오를 즉시 비교해 드립니다

4개 시나리오 즉시 비교

사업 축소(A)·추경(B)·이월(C)·불용·반납(D)을 법적 조건·재정 효과·위험도로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법적 의무와 권고사항 구분

계약·보조금·이월 요건을 지방재정법·세출집행기준 기반으로 의무와 권고로 나눠 안내합니다

직급별 맞춤 보고서·문안 즉시 제공

실무자·예산부서·단체장용 보고서와 의회·계약상대자·주민 안내문을 바로 편집 가능하게 드립니다

의회 삭감 취지 우회·허위 원인행위·분할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예산팀, 본회의 의결 다음 날 아침 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BEFORE

어제 본회의에서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2억 삭감됐는데…
이미 설계용역 계약은 체결했거든요.
계약 해지해야 하나요? 이월하면 안 되나요 국비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체장님한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춘천시 예산팀 담당자
(가상 시나리오)

삭감액·사업 단계·재원 구조 입력

AFTER

즉시 보류 조치

신규 발주·교부·계약 잠정 보류 필요성 즉시 판정
–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일률 중단 권고하지 않음

A~D 시나리오 비교표

사업 축소(A) / 추경(B) / 이월(C) / 불용·반납(D)
4개 시나리오를 법적 조건·국비 영향·의회 승인 필요 여부로 한눈에 비교

단체장 보고·문안 즉시 제공

5줄 요약 보고·의회 설명문·계약상대자 협의문·주민 안내문을 바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 삭감액·사업 단계 정보가 없어도 즉시 잠정 조치표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강원도 춘천시는 가상 시나리오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삭감액과 사업 단계 입력 — 오늘 결정사항까지 한 번에

① 삭감액·사업 단계·재원 구조 입력
(예: "2억 삭감, 설계 계약 체결 후, 국비 50%")

→

② 즉시 보류 조치·계약·의무지출 예외 확인

→

③ A~D 시나리오 비교표 검토

→

④ 1순위 권고안·오늘 결정사항 수령

→

⑤ 직급별 보고서·의회·계약상대자·주민 문안 수령

기대효과

🕒 삭감 당일 방향 잡기

집행 중단·사업 축소·추경·이월·불용 중 무엇이 가능한지 8가지 기준으로 즉시 판정해 드립니다

👤 직급별 맞춤 출력

실무 담당자·예산부서·단체장 각각 필요한 내용만 다르게 제공합니다

⚖️ 재정 윤리 원칙 준수

의회 삭감 취지 우회·허위 원인행위·분할계약 등 부정 집행은 어떤 경우에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용·전용·이월·반납·계약 변경은 권한 있는 예산·회계·계약·법무 담당자의 검토와 필요한 의결·승인을 거쳐 확정하십시오.



연말 예산 소진 — 잔액을 6가지로 즉시 분류하고 부정 집행을 차단합니다

잔액 6분류 즉시 판정

정상 집행·명시이월·사고이월·감액·불용·반납 중 어느 경로가 적법한지 사업별로 즉시 분류해 드립니다

부정 집행 즉시 차단

허위 원인행위·분할계약·허위 검수·차년도 선구매 등 연말 몰아쓰기 위험 행위를 즉시 경고합니다

이월·불용 사유서·보고서 즉시 제공

명시이월 검토 요청·사고이월 증빙·불용 사유서·보조금 반납 일정 통보 문안을 바로 편집 가능하게 드립니다

'예산 소진'은 잔액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불용과 반납도 정상 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D 구청 예산팀, 12월 중순에 부서별 잔액 정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BEFORE

연말인데 **잔액 남으면 내년에 예산 깎인다**고 해서…
일단 사무용품이랑 소모품 왕창 사려고요.
계약 체결하면 이월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 잔액도 그냥 쓰고 남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D 구청 예산팀 담당자
(가상 시나리오)

부서·사업·잔액·재원·사업단계 입력

AFTER

즉시 위험 경고

집행률만을 위한 사무용품 대량구매·형식적 계약 체결·보조금 목적 외 사용 즉시 중단
– **허위 원인행위·허위 검수·분할계약** 적색 위험 즉시 표시

잔액 6분류 즉시 판정

정상 집행(납품·검수·지급 가능) / **명시이월**(의회 의결 필요) / **사고이월**(유효 원인행위·불가피한 사유 확인) / **감액** / **불용** / **보조금 정산·반납** — 사업별 잠정 분류표 즉시 제공

이월·불용 문안 즉시 제공

명시이월 검토 요청·사고이월 증빙 요청·불용 사유서·보조금 반납 일정 통보 문안을 바로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 잔액·재원·사업단계 정보가 없어도 즉시 잠정 분류와 위험 경고를 제공합니다 (자료 신뢰도 C등급 기준)

※ 광주광역시 D 구청은 기상 시나리오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함니다.

사업명·잔액·사업단계 입력 — 오늘 결정사항까지 한 번에

① 부서·사업·잔액·재원·사업단계 입력
(예: "시설공사 잔액 3천만 원, 계약 체결 후 착수 전, 국비 50%")

→ ② 부정 집행 위험 즉시 경고·위험 집행 보류

→ ③ 잔액 6분류 잠정 판정·법정·내부기한 확인

→ ④ 이월 유형별 요건 검토·불용·반납 사유서 수령

→ ⑤ 조치 일정·담당·완료기준·상황보고 수령

기대효과

연말 마감 전에 방향 잡기

출납 폐쇄기한(12.31.)·**출납사무 완결기한**(익년 2.10.)·**보조금 정산기한**을 기준으로 **오늘 결정사항**을 **즉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월 유형 3가지 요건 즉시 구분

명시이월(의회 의결 필요)·**사고이월**(유효 원인행위·불가피한 사유)·**계속비 이월 요건**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안내합니다

최신 공식 기준 확인

불용·반납도 정상 대안

집행 필요성과 **법적 요건**이 없으면 **불용·감액·반납**을 **정상 경로로 제시**하며, **감사·결산**에 필요한 **사유 기록**을 함께 지원합니다

실제 처리는 대상기관과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회계규정·예산집행기준, 지방의회 의결, 보조금 교부조건, 계약 이행상태와 기관 내부 마감절차에 따라 확정하십시오.

AI는 행동 순서를 잡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시 대응
자료 없어도
즉시 임시 대응안 제공

적법 처리
법령 실시간
확인 후 안내

윤리 원칙
금지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음

발행처: (주)스캐터엑스
발행인: 강명수 대표이사
발행일: 2026년 11월 16일

X-Monster
총괄 기획: 최규호 본부장

감사합니다. Thank you.